

프랑스 : 불안정한 정국 속 멀어지는 '완전 고용'과 실업보험 개혁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최근 들어 프랑스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전개됐다.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밀어붙이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이에 반발한 국회가 지난 9월 8일 내각 불신임안 투표를 통과시키면서 탄핵되었다.¹⁾ 뒤를 이어 총리 자리에 오른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총리는 지난 10월 6일 총리 취임 약 한 달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10일 그를 다시 총리로 지명했고 이에 반발한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당과 '국민연합(RN)'은 곧바로 내각 불신임 투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²⁾ 다만 '사회당(PS)'은 프랑스 정부가 2023년 은퇴연금 개혁안에 대한 폐지 및 재논의 개시 등을 수용하면서 내각 탄핵에는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국회의 내각 불신임 투표는 부결되었다.³⁾ 이처럼 약 두 달 사이에 두 명의 총리가 국회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이 중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던 총리가 다시 총리에 임명되는 등 프랑스 정국의 불안정성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약 두 달 사이에 세 번의 정부 내각, 두 명의 총리가 들어서면서 정부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각종 현안 관련 논의도 멈추면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사임을 표명한 총리가 다시 총리로 임명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불거졌지만,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절차가 이제 막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1) <https://www.vie-publique.fr/en-bref/300056-lassemblee-nationale-ne-vote-pas-la-confiance-au-gouvernement-bayrou>

2) Le Point, "Gouvernement Lecornu II : LFI et le RN préparent la censure, "no comment" du PS", 2025.10.13.

3) Franceinfo, "Rejet de la motion de censure contre le gouvernement Lecornu : découvrez quels députés ont voté le texte dans notre moteur de recherche", 2025.10.16.

이처럼 오늘날 프랑스 정국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하며 내세웠던 국정 과제도 점차 표류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급증하는 국가 부채 규모 축소와 실업자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 등을 강조하며 현행 실업보험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 예산안과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실업보험 개혁의 내용과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실업보험 개혁

내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서 노동과 고용 관련하여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중 하나이자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실업보험 개혁이다. 지난 8월 9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당시 바이루 정부는 노동조합과 경영인 단체 등 사회적 협의 파트너들에게 실업보험 제도 개혁 관련 내용을 담은 기획 서안을 전달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실업보험 관련 매년 20억 유로(한화 약 3조 3,833억 원)에서 25억 유로(한화 약 4조 2,291억 원) 절감을 목표로 한다. 해당 문서는 예산 절감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2030년부터는 최소 40억 유로(한화 약 6조 7,666억 원)를 절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

프랑스 정부는 실업보험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낮추려는 이유를 실직자가 빠르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현재 프랑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노동이 요구되며, 현재 실업보험 재정 상황을 보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금 최대 수령 기간을 결정하는 실업보험 수급 개시의 기준인 최소 노동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업보험 관련 예산 규모를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실업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 협의 파트너들에게 11월 15일까지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⁵⁾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즉각적으로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프랑스노동총연맹(CGT), 노동자의힘(FO),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 프랑스관

4) Le Monde, “Réforme de l’assurance-chômage : le gouvernement veut atteindre entre “ 2 milliards et 2,5 milliards d’euros “ d’économies par an de 2026 à 2029”, 2025.8.9.

5) Franceinfo, “Le gouvernement entend réaliser “a minima 4 milliards d’économies par an” sur l’assurance-chômage à partir de 2030”, 2025.8.9.

리직총동맹(CFE-CGC), 프랑스기독교노동조합(CFTC) 등은 공동 성명을 내면서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⁶⁾

실업보험과 관련한 논쟁 중 하나는 일명 ‘상호 합의 계약 종료(rupture conventionnelle)’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정부는 실업보험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상호 합의 계약 종료’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노동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정규직 계약(CDI)에만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부 공무원도 가능하다.⁷⁾

프랑스 정부가 ‘상호 합의 계약 종료’를 실업보험의 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를 통해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무엇보다 ‘상호 합의 계약 종료’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실업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⁸⁾

현행 제도에서는 ‘상호 합의 계약 종료’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 이에 앞서 일정 기간 이상 노동을 했었고 구직 의욕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 실직자 및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에만 51만 5,000건의 ‘상호 합의 계약 종료’가 이루어졌고 이는 지난 5년 사이에 17%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24년도 ‘상호 합의 계약 종료’ 실업자에게 제공된 실업보험금은 94억 유로(한화 약 15조 9,05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실업보험금 지급액에서 26%를 차지한다.

프랑스 정부는 ‘상호 합의 계약 종료’의 경우 실업보험금 지급 보류 기간을 현재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고용주가 계약 종료를 합의한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을 고려해서 실업보험금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⁹⁾

실업보험 개혁안을 마련한 바이루 내각이 국회의 불신임 투표로 탄핵됐고, 뒤를 이어 받은 르코르뇌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는 등 정국이 어수선하게 흐르면서

6) Libération, “Assurance chômage : les partenaires sociaux conviés à négocier pour faire des économies”, 2025.8.9.

7) TF1 Info, “Ruptures conventionnelles : pourquoi sont-elles dans le viseur du gouvernement?”, 2025.7.16.

8) TF1, “Bonjour ! La matinale”, 2025.7.16.

9) Franceinfo, “Ruptures conventionnelles : ce qui pourrait changer à l’avenir”, 2025.11.10.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사회적 협의 파트너들과의 협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르코르뇌 총리가 다시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7일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인 국시원(Conseil d'État)은 바이루 정부에서 마련했던 실업연금 개혁 관련 기획안은 유효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¹⁰⁾

이처럼 실업보험 개혁 관련 논의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되면서 5개의 노동조합(CFDT, CGT, FO, CFE-CGC, CFTC)과 2개의 사용자 단체(CPME, U2P)는 공동 명의로 르코르뇌 총리에게 앞서 정부가 제안한 실업보험 개혁 협상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즉 기존에 제시된 개혁안을 사실상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르코르뇌 총리는 실업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보다는 '상호 합의 계약 종료'에 집중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¹¹⁾

■ 점차 멀어지는 '완전 고용'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프랑스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6월 30일 1차 투표와 7월 6일 결선 투표를 거쳐 국회를 다시 구성했다. 앞서 열렸던 유럽연합 의회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일종의 대통령 재선임 성격을 갖는 총선을 치름으로써 정치적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선거 결과 좌파 정당들이 결집한 선거 연합체가 국회의 다수 세력이 되었고, 여당 세력은 '국민전선' 정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 연합보다 조금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결과를 얻는 데 그쳤다. 사실상 선거 참패의 결과로 여당 진영은 앞선 국회에서보다 약 80석 가까운 의석을 잃고 국회 제2세력이 되며 여소야대 정국에 들어선다.

대통령과 국회 주도 세력이 분리되면서 특히 총리 및 그에 따른 내각 구성에 있어서 각 세력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국회 해산 후 치러진 2024년 총선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총리직을 수행하였으나 선거 결과에 따라 물러난 가브리엘 아탈부터 현재 르코르뇌 총리까지 약

10) Franceinfo, "Assurance-chômage : le Conseil d'État permet l'ouverture d'une nouvelle négociation", 2025.10.17.

11) Franceinfo, "Assurance-chômage : les syndicats demandent au gouvernement de renoncer formellement à une réforme globale", 2025.11.15.

<표 1> 2024년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 정치세력별 의회 의석수

(단위 : 석)

정치 세력	의석수
신인민전선 (좌파 선거 연합)	182
양상블 (여당 선거 연합)	168
국민전선 선거 연합	143
공화당	46
기타 우파	14
기타 좌파	13
중도	6
지방분권주의	4
기타	1

자료 : Le Monde, “Les résultats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2024”, 202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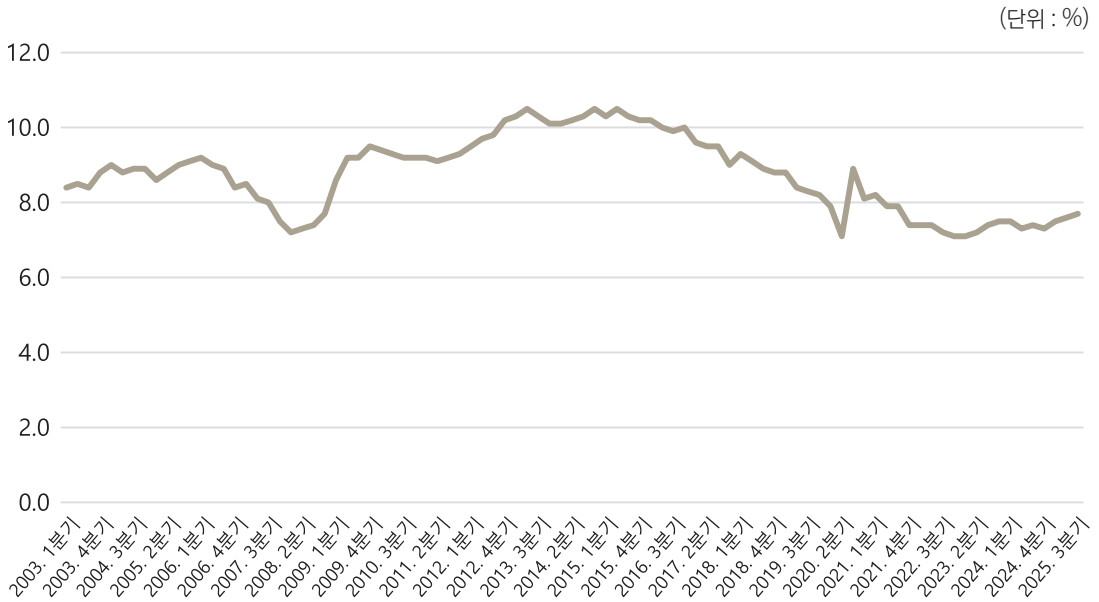
1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총 4명의 총리가 있었다. 르코르뇌 총리의 경우, 한 번 사임 후에 다시 임명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5명의 총리가 바뀌었던 셈이다.

이처럼 프랑스 내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으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목표 추진 동력은 상당히 상실됐다. 단적인 예로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2023년 은퇴연금 개혁안도 일시적으로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르코르뇌 총리를 재임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은퇴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논의의 여지를 연 것이다.

이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완전 고용’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실업률을 5% 이하로 떨어뜨리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며, 2023년 11월 14일에는 정부 주도로 마련된 일명 “완전 고용법(loi pour le plein-emploi)”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프랑스 고용지원 정책의 핵심 축을 ‘프랑스 고용센터(Pôle emploi)’에서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로 재편하면서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연대수당(RSA)” 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이 혜택을 받는 경제적 지원과 고용지원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보다 빠르게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

12) 이두형(2024), 「프랑스 : 암울한 2025년 일자리」, 『국제노동브리프』, 22(6), pp.67~74.

[그림 1] 2003~2025년 분기별 프랑스 실업률



주 : 프랑스 해외영토 마요트(Mayotte) 제외.

자료 : INSEE(2025), "L'essentiel sur... le chômage", <https://www.insee.fr> (2025.11.17).

하지만 올해 프랑스 실업률 추이를 보면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에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통계청이 11월 1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업률은 7.7%를 기록하며 앞선 2분기 7.6%보다 0.1% 상승했다. 이는 실업률을 추산한 이후 가장 높았던 2015년 중순보다는 2.8% 낮지만 지난해 2024년도 3분기와 비교하면 0.3% 높다는 설명이다.¹³⁾

올해 들어서 프랑스의 실업률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실업률은 7.3%였고, 2025년 1분기에는 7.5%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2분기는 7.6%, 3분기는 7.7%로 매 분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노동시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으로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실제 ‘완전 고용’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

13) INSEE(2025), "Au troisième trimestre 2025, le taux de chômage s'établit à 7,7%, en hausse de 0,3 point sur un an", <https://www.insee.fr> (2025.11.17).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재정이 악화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으로 실업률 5% 이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후부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완전 고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¹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보험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하나는 실업보험으로 인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국가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업자가 빠르게 일자리 찾기에 나서도록 하면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업보험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완전 고용’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새인 실업률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실업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오늘날 프랑스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안개 속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시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고 정부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며 관련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노동과 고용 관련한 내용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보험 개혁이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또한 앞서 제시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지만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 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실업 문제에 접근하는 프랑스 정부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프랑스 정국의 불안정성이 노동과 고용 관련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다. **KLI**

14) BFM TV, “Il avait réussi à le faire fondre et promettait le plein-emploi en 2027 : alors que le chômage remonte mois après mois, l’objectif de Macron paraît définitivement compromis”, 2025.11.13.